

인국		
등록일	B7	75

인권정보자료실
CPh1.6

긴급토론회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 실태와 문제점

- 일 시 - 1998년 11월 2일(월) 오후 2시~5시 30분
- 장 소 - 언론연구원 강의실(프레스센터 12층)
- 공동주관 -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 주 최 - 언론개혁시민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시청자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학술단체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맹(준), 환경운동연합)

인권정보자료실
CPh1.6

긴급토론회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태도 : 실태와 문제점

■ 인사말 : 김종배(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주최 : 안병욱 (가톨릭대)

■ 발표 및 토론

1. 학문·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현대사 연구 왜곡 보도 사건'

-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

발표 : 이종오(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2. 안보 상업주의와 조선일보의 선택

발표 : 김동민(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사회 : 안병욱(가톨릭대 국사학과 교수)

토론 : 강민(전 한국정치학회 회장, 단국대 명예교수)

김형완(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

류한호(언론학회 커뮤니케이션 정책연구회, 광주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방정배(한국언론학회 회장, 성균관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성유보(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이사장)

손호철(한국정치연구회 회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유초하(민교협 상임의장, 충북대 철학과 교수)

■ 성명서 발표 (5:30~)

학문·사상의 자유와 '최장집 교수 현대사 연구 왜곡 보도 사건'

-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 -

이 종 오
계명대 사회학과 교수

조선일보사가 발행하는 월간조선 1998년 11호에 “최장집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6·25는 김일성의 역사적 결단’이라는 부제가 붙은 기획기사가 게재된 이후 한국사회는 다시 한번 “사상논쟁”이라는 과거의 구습을 목도하게 되었다.

이러한 구습은 가까이는 1994년의 경성대학교 “한국사회의 이해” 사건, 서강대 박홍 총장의 “주사파” 발언 사건, 그 이전의 서사연 사건 그리고 1988년의 한양대 학술단체연합 공동 학술심포지엄에서의 서관모 교수 논문을 둘러싼 공안적 공방에 이어지는 계보를 지니고 있다.

물론 더 거슬러 올라가면 50년대의 경향신문 필화사건을 비롯하여 전 분단사는 학문·사상 그리고 언론에 대한 사상검증과 이에 의한 탄압으로 얼룩져 있다. 특히 7,80년대에 이르러서 교수를 위시한 한국의 수많은 지식인은 해직, 투옥 그리고 최종길 교수의 경우와 같이 고문과 비명횡사의 위협 하에 놓여있었다.

한국사회에서 자유로운 지식인의 존재라는 것은 구 제정러시아의 “인텔리겐짜”의 운명과 같이 참으로 불운한 “존재”였던 모양이다.

언론권력 조선일보의 “최장집 죽이기”는 이러한 분단시대 전통의 충실한 계승에 다름 아

니다.

조선일보가 “대통령자문정책기획위원장”이 매우 수상한 역사관을 지니고 있다고 외치자마자 한나라당, 자유총연맹 기타 “애국적” 단체와 인사들에 의해서 이러한 좌익인사를 즉각 파직하라는 합창이 울려나오고 있다.

조선일보의 “발견”은 다시 한번 국가안보의 엄중함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고 나아가 “애국세력”의 대동단결을 불러일으키는 단초로 작용하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이러한 지식인에 대한 공안적 사건은 한국사회에서 일정한 주기를 두고 발생하고 있는데 금번의 이 주기는 무엇에 해당하는 것이며 한국의 시민사회는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 것인가?

10.29. 권력정당 모임 '성구회' 18일로 전모세미나
권력정당발제: 최장집 역사연구에 대한 논란 양상.
"김일성의 정당을 부정한다는 건"과. 예언은 허다다 즉각 파직해야 한다.
대한민국 3당과 3권 요격이 안장돼 있는 양상을 우려.
한 민주 3당에 3권 요격은 최장집 뿐 아니라 "민주주의와 탈냉전평화"에
여야한 크나큰 위협. 도전.

1. 탈냉전평화주의에 대한 위협

이번 사건이 과거의 사건과 다른 한가지 특징은 과거에 지식인의 지적작업에 대한 공안적 접근의 주체가 기본적으로 국가기관이었다면 이번에는 조선일보라는 사회기관, 사적 기관이 그 주체로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1997년의 대선에 의한 정권교체가 가져온 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가 과거의 정부와 뚜렷한 정책적 차이를 내보이는 것은 무엇보다도 대북, 통일정책에서 나타난다. 이는 현재 북한의 공식기관과 남한의 보수적 성향의 인사들에 의해서 공통으로 배척되고 있는 이른바 “햇볕론”에 입각한 대북포용정책에서 나타난다. 햇볕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건 폐기하건 이 정책의 성공은 결국 한반도의 냉전체제, 분단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 더욱 나아가 이는 남북의 내부에 다같이 존재하는 국내적 냉전체제의 해체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정주영의 “소떼몰이”와 금강산 관광 역시 이러한 변화를 예감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매우 의심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남북의 수구세력은 입을 모아 변화를 비판하며 분단체제의 온존을 외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북한의 강경론자들은 혁명세력, 진보세력이라기보다는 한반도에서 2등 아니면 1등 가는 “보수세

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는 “햇볕론”에 대항하는 남북의 “보수대연합”이 형성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최장집 교수의 논저가 이른바 “친북좌익”의 기초에 서있지 않음은 일일이 해명할 필요조차 없다. 단지 그의 문제된 저서를 훑어보기만 한 사람이라면 최 교수의 논저는 남북의 냉전세력에 대한 비판과 이의 극복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가 없다. 지금 성명을 발표한 한나라당이나 “애국적” 단체들이 한번이라도 논문을 읽고서 하는 소리인지 혹은 월간조선이 교묘하게 왜곡, 편집한 자투리 문장에 의거해서 엄청난 소리를 하는 것인지는 자명하다고 하겠다. 문제의 본질은 최 교수의 논문을 오해하였는지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보수세력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조선일보를 대변자로 가지고 있는 남한의 보수세력이 한국정부의 개혁정책, 특히 탈냉전평화주의에 대한 전면적 부정과 도전을 개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는 결국 기존의 냉전체제, 남북대결구조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의도의 반영이며 이는 객관적으로 북의 강경세력과 동일한 의도와 목적을 지니고 하는 일이다. 냉전체제의 해체로 자신의 입지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초조감과 우려감을 가지고 있는 세력의 얼토당토 않은 사상논쟁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이다. 조선일보는 이미 “이승복 소년” 사건과 이의 보도과정을 통하여 한국사회의 탈냉전화와 변화의 조짐에 대하여 일침을 기하였다.

2. 전체주의적 “광기”에 의한 민주주의의 위협

최 교수는 그의 저작에서 한국전쟁의 해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면을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에 관하여 할애하였으며 한국전쟁은 기본적으로 그 역사적 배경으로서 즉 조건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문제가 된 최 교수의 저서명이 『한국민주주의의 이론』,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제』라는 점을 유의해 보자. 저서명에 나오는 바와 같이 최 교수의 근본적 문제의식은 한국의 국가와 사회에서의 민주주의의 문제인 것이다.

조선일보가 최 교수의 민주주의관이나 노동운동에 관한 부분은 차치하고 유독 “한국전

쟁”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은 이 주제가 보수진영을 가장 쉽게 격동시킬 수 있는 예민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는 몇 가지 어귀와 문장을 차출하여 보수 진영을 감정적으로 자극 “선동”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의 “사상논쟁”은 과거의 대부분의 사상논쟁이 그러하였듯이 토론이 아니라 선동이며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의거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다원성이 허용되는 사회이며 따라서 진보와 보수가 다같이 시민권을 누리고 있는 사회이다. 여기에서 진보의 혹은 보수만의 배타적 시민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이 사회를 다시 한번 이념적 독재 혹은 전체주의 사회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최장집 교수 죽이기”는 이러한 전체주의화의 시발이며 자유와 민주 그리고 진보를 주장하는 세력은 이를 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특히 파괴적인 것은, 이는 보수를 말살하려는 전체주의적 좌익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최교수와 같은 이념적 다원성을 인정하는 자유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서 극우적 즉 반민주적인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아니며 민주주의에 대한 극우의 위협으로 보아야 하며 전체주의적 “광기”의 발로인 것이다. 따라서 이는 민주 대 반민주의 문제이며 나아가서 문명 대 야만의 구도인 것이다.

3. 민주주의, 시민사회 그리고 “학문·사상의 자유”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는 과연 위기에 놓여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하여야겠다. 한국사회는 87년의 6월항쟁 이후 어렵고 힘든 민주화로의 도정에 들어섰다. 여기에는 계속된 좌절과 지체가 있었으나 97년 대선으로 인한 정권교체는 민주화의 중요한 성과의 하나임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살펴 보아야할 점은 6월항쟁 혹은 7,80년대 민주화운동의 역동력이 한국사회에 얼마나 남아있는가 하는 점이다. 의심할 여지없이 혹은 당연한 일로서 80년대에 비하여 90년대의 한국사회는 보다 보수적이다. 80년대와 같은 혁명적 에너지는 학생운동이나 노동운동에서 다같이 확인하기 어렵다. 그러나 이것이 특별히 우려하거

나 개탄할 사항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이는 군부권위주의 정권의 “역사적” 퇴진이라는 조건의 반영이며 또한 풍요의 90년대를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97년의 소위 “IMF사태”라는 것도 아직은 사회저변의 혁명적 결집이나 동요를 가져오지는 않고 있으며 한국의 정치체제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이다. 한국사회는 현재의 경제, 사회적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만 있다면 50년만에 혹은 최초로 위기국가에서 벗어나 세계적 수준에서의 정상적인 국가와 사회를 이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전제하여야 할 것은 분단문제의 평화로운 해결과(반드시 통일국가의 건설이 아니더라도) 아울러 사회문제 특히 노동문제의 합리적 해결이다. 한국의 국가와 사회는 이후 세계시민적 관점에 서있는 세계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은 열려있는 시점이며 김대중 정부의 이른바 “개혁”의 전망에 대하여 조금씩 단정하거나 포기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미래가 열려있다는 관점에서는 다른 부정적인 진로도 역시 가능한 것이다. 87년 이래의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시비는 항상 이러한 열려있는 시점에서의 구체제에 안주하려는 세력에 의해서 도발되어졌으며 지금의 사안도 그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집권세력이 만약 최 교수를 “희생양”으로 하여 보수회귀세력과 적당한 타협을 시도한다면 이는 개혁의 전망을 심히 어둡게 하는 우매한 처사가 될 것이다. 김영삼 정권이 개혁에 대한 도전세력에 너무나 쉽게 타협한 것이 결국 김영삼 정권의 정치적 몰락을 가져왔음을 현재의 집권세력은 교훈으로 삼아야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민주주의의 진전은 집권세력의 의지와 아울러 시민사회의 확대에 달려있다고 여겨진다. 시민사회의 확대와 발전이야말로 한국사회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확실히 넘어가는 “담보”인 것이다. 학문·사상을 검증하고 통제한다는 것은 사회가 야만적인 즉 원시적으로 미발달된 단계에서나 나타나는 일이다. 시민사회의 전개와 발전은 바로 이런 야만성을 극복하는 도정인데 이런 단초가 지금 한국사회에는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가능성을 키워내는 것이 바로 “한국민주주의의 전제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장집 죽이기”가 실현될 때에 이는 한국사회의 야만성의 재확인이 될 것이며 시민사회의 엄청난 좌절과 후퇴를 의미한다.

시민사회는 이제까지 국가보안법, 사상전향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전개한바 있다. 이

계 최장집 교수 사건은 학문·사상의 자유에 대한 또 하나의 중대한 도전이며 나아가서 한국사회가 문명으로 갈 것이냐 혹은 야만으로 남을 것이냐의 분수령을 이룰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집권세력, 지식인과 시민사회는 이 문제를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상정할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상정하여 진지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이들은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위협을 가져오는 극단세력에 대한 타협 없는 단호한 대처와 아울러 또한 다시 한번 한국사회에 대한 계몽의 노력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즉 다수의 대중이 극우의 선동에 포로가 되는 사태를 방지하여야 한다.

보수와 극우는 구분되어야 하며 오히려 합리적 진보와 보수세력은 다같이 극단세력을 비판하여야 한다.

자유, 민주주의, 박애, 연대와 같은 기본적 근대사회의 가치는 결코 낡은 것이 아니며 이미 완성된 것도 아니다. 여기에서 경쟁력, 시장과 같은 "IMF형" 언술이 이러한 기본적 가치를 퇴색시키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이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중에서 강조점은 오히려 전자에 두어야 한다.

이제 한국의 국가와 시민사회는 다시 한번 민주주의와 문명에 대한 도전을 극복하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오히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하겠다. ■

안보 상업주의와 조선일보의 선택

김 동 민

한일장신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조선일보도 한때는 좌익이었다 - 친소 좌익 상업주의의 원조

조선일보는 이제 안보 상업주의의 대명사가 되었다. 안보 상업주의는 조선일보의 사세를 키우고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증폭시켜준 디딤돌이었다. 안보 상업주의에 관심을 가진 세계의 학자들은 서울로 오면 된다. 조선일보를 빼놓고 안보 상업주의를 논할 수는 없다. 조선일보는 그만큼 각별한 연구대상이다.

물론 조선일보는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승복 신화가 진실이라고 우기는 월간조선의 이동욱 기자는 9월25일자 『조선노보』에서 언개연 오보전시회 등에 대해 '친북한 좌익 상업주의'라고 비난하였다. 조선일보의 엉터리 장단에 맞추어 맹목적으로 북한을 비방하지 않으면 모두 '친북한'인가? 나는 좌익 상업주의라는 딱지를 조선일보에 되돌려주고자 한다. 우리 사회에 좌익 상업주의는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 1980년대 이념서적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출판분야의 좌익 상업주의는 불을 이룬 적도 있다. 아마 그 때도 조선일보는 이를 좌익 상업주의라는 이름으로 질책했을 것이다. 당시의 지적은 타당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언개연 등을 좌익 상업주의라고 칭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언개연 등은 조선일보의 뒤틀린 안보관과 그것을 영리적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안보 상업주의를 탓할 따름이기 때문이다.

학문과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상업주의에 물들지 않은 순수한 좌익은 보호되어야 한다. 이는 순수하게 국가안보를 걱정하는 주의나 극우적인 사상까지도

보호를 받는 것과 같은 이치다. 다만 좌익이건 안보건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믿는다. 상업주의는 좌익이나 안보에 공히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 좌익 상업주의는 좌익 사상을 확산시키는 데 일정한 공헌을 하기도 했지만, 안보 상업주의는 애매한 국민들을 흥분시키고 불안에 떨게 한 공(?)은 있을지언정 정작 안보에는 해악을 끼치는 부작용을 초래했다. 조선일보의 안보 상업주의는 국가안보를 지키기 위한 애국적 결단이 아니라, 안보를 빙자한 여론몰이와 그 반사효과라 할 수 있는 영리의 추구 및 영향력의 확대 재생산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가 조선일보를 문제삼는 것은 이 때문이다. 게다가 조선일보는 그들이 비난하는 좌익 상업주의를 주요한 경영정책으로 채택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를테면 좌익 상업주의의 원조격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는 일제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주지하듯이 조선일보는 1920년 3월 5일 친일상공인 단체인 대정실업친목회의 주도로 창간된 신문이다. 따라서 친일신문으로 낙인찍힌 조선일보는 독자들이 외면함으로써 경영의 어려움을 타개하지 못하고 수차에 걸쳐 발행인이 바뀌는 불행을 겪었다. 그러던 중 동아일보 영업국장으로서 있던 홍증식이 신석우의 부친 신태휴를 설득해 8만 5천 원으로 회사를 인수, 1924년 9월 경영권이 신석우에게로 넘어갔다. 홍증식은 이 때 박헌영을 비롯하여 사회주의 성향을 기자들을 대거 기용하였다. 사장으로는 민족진영의 지도자 월남 이상재를 추대하고 논설위원에 김준연, 신일용, 사회부 기자에 박헌영, 임원근, 김단야, 조봉암, 지방부 기자에 홍남표, 홍덕유 등 다수의 사회주의 진영의 기자들을 채용했던 것이다. 이로 인하여 조선일보는 민족주의 일색의 동아일보에 대비되어 사회주의 신문이라는 세평까지 듣게 되었다. 친일지의 족쇄를 거두면서 차별화를 꾀하였던 셈이다. 이 때는 1920년을 전후로 한 시기에 일어난 국내의 사회주의 사상이 광범위하게 확산되던 때였다. 특히 젊은층 사이에서 사회주의 사상은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조선일보는 1925년 9월 5일자 “소련의 힘을 빌어 조선 독립을 쟁취하자” 라는 내용의 신일용의 사설이 문제가 되어 정간을 당하고, 총독부의 요구에 의해 사회주의 기자들이 해직될 때까지 만 1년 동안 좌익신문이나 다름없었다. 조선일보가 사회주의 기자들을 대거 채용하여 사회주의 신문이라는 세평을 즐겼던 까닭은 상업적인 데 있었다. 영리적인 목적으

로 사회주의를 상품화했던 것이다. 진정으로 사회주의를 지지하거나 독립을 갈망했던 것이 아니었다. 이게 좌익 상업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조선일보는 과거를 반성하기 전에는 좌익 상업주의를 탓할 자격도, 더구나 안보 상업주의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의 순수한 열정을 반박할 까닭도 없다.

2. 조선일보의 선택과 그 배경

조선일보는 친일 이미지를 벗고 독자를 확보해나가기 위한 방편으로 총독부의 비위를 거스르는 기사를 양산하기도 했다. 실제로 총독부로부터 압수 정간당한 횟수가 동아일보보다 더 많았다. 예를 들어 창간 이후 1925년까지 총독부로부터 압수당한 건수를 보면 동아일보는 173건에 조선일보가 183건이었다. 조선일보가 혁신을 단행하기 전까지, 즉 1923년까지의 압수처분 기록만을 보면 동아일보 60건에 조선일보 79건으로 나타난다.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것이었다. 단순히 횟수가 조금 더 많다는 것보다는 친일신문이 오히려 이토록 많은 횟수의 압수를 당했던 배경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총독부와 유착관계에 있는 대정실업친목회가 주도하여 만든 친일신문 조선일보가 동아일보 보다 더 많은 압수기록을 남기고, 사회주의 신문으로까지 변신한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많은 독자를 확보하여 구독료와 광고 수입을 올려 신문사를 유지시키는 것이었다. 상업주의적 생존전략이었다. 이 목적을 위해서는 총독부의 비위도 가끔씩은 건드려 부러 압수도 당하고 사회주의 신문이라는 세평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친일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해 압수와 정간을 연출하고 사회주의 독자들에게 추파를 던지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생존논리는 조선일보의 전통으로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것 같다.

“조선일보에게는 민족보다도 우선하는 것이 신문사의 존속이었다. 신문사만 유지될 수 있다면 어떤 주의 주장도 주저 없이 선택할 수 있으며, 민족의 고통도 외면할 수 있고 동포를 사지로 몰아넣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조선일보의 신념은 정세의 흐름에 따라 수시로

바뀐다. 그러니 오늘날 조선일보가 극우노선과 안보 상업주의를 선택했다고 해서 그것이 영원히 가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¹¹ 1930년대 말에 일제가 조선인에게 지원병제도를 실시하자 조선일보는 이에 적극 호응하였다. 1938년 6월 15일자 사설 하나만 보겠다.

조선 통치사상에 한 '에포크 메이킹'이요 南총독의 일대 영단정책 하에 조선에 육군 특별 지원병제도가 실시되게 된다는 데 대하여 이미 본란에 누차 우리의 찬의를 표한 바 있거니와 거(去) 4월 3일의 신무천황 제일을 복(卜)하여 본제도가 공포되고 그 실시에 대한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는 중에 잇섯는데, 그동안 일반 민중의 열렬한 기대 가운데서 지원병 원서접수 기한인 4월 10일까지에 지원자수는 3천 명을 초과하는 성관(盛觀)을 나타내었고..... 금일은 남총독의 입장하에 훈련소의 개소식을 거행하게 되었다. 이것이 어찌 국가의 성사(聖事)가 아니며 경행(慶幸)이 아니라.

친일신문으로 시작해 생존을 위해 반총독부 노선을 취하기도 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선택하기도 했던 조선일보는 중국에는 다시 친일신문 또는 일제의 대변지로서 반민족적인 속내를 드러내고 말았다. '누차'에 걸쳐 지원병제도의 확대 실시에 감응하고 환영해마지 않더니 급기야는 3천여 명의 동포 청년들이 훈련소에 입소하여 사지로 들어가는 것을 이토록 축하하고 있는 것이다.

친일행적으로 인하여 해방 이후 근신하며 절치부심하던 조선일보측(방응모)은 미군의 협조를 받아 신문 발행을 재개하였다. 조선일보는 이 때도 절묘한 선택을 한다. 당시 국민들의 추앙을 받던 김구를 지지하는 논조를 보인 것이다. 친일했던 신문이 임시정부 노선을 지지한다? 이 역시 다분히 상업적인 선택이니 '임정 상업주의'라고나 할까? 이후로 조선일보는 이승만 정권에서는 반독재, 박정희 정권 이후로는 친독재의 노선을 선택하였다. 갈짓자도 보통 갈짓자를 걸은 게 아니다. 조선일보는 저널리즘의 정도를 건지 못하고 언제나 이처럼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때로는 조작된 상징을 필요로 했다. '친독재'는 언론이 공개적으로 취할 상징은 아니기에 그 시대에 걸맞는 상징을 필요로 했고 그래서 찾아낸 것이 반공 내지는 '안보'라는 상징이었다. 안보를 내세우면 장사가 잘 되고 여론을 주도적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 첫 작품이 이승복 신화

였던 셈이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어떤 이념적 선택을 할 때 그 배경에는 항상 기본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을 확대 재생산하려는 계산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저널리즘의 정도나 순수함은 찾아볼 수 없다. 친일에서 시작하여 약간의 반일을 가미한 민족지 흥내, 그리고 다시 친일, 이어서 임정 지지와 반독재, 친독재, 반공(안보)으로 이어지는 거듭되는 변신의 배경에는 자사 이익의 도모가 유일한 가치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조선일보의 최근 대표적인 안보 상업주의 작품들로는 금강산댐 부풀리기와 대응댐(평화의 댐) 건설 촉구, 성혜림 망명설 오보, 김일성 사망설 오보, 이석현 의원 명함 파동,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오보 등을 거쳐 최장집 교수 건에 이르고 있다. 조선일보가 이처럼 많은 오보 내지는 허보를 양산해내는 것은 다름 아닌 생존의 논리인 것이다. 그리고 이 기사들이 오보로 밝혀져도 정정이나 사과도 없이 넘어가고, 이를 지적하는 이들을 친북한 좌익 상업주의로 매도하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허위보도를 하여도 무방하다는 태도를 보여왔다. 또 그것은 국가안보를 위한 것이었다고 강변해왔다.>

최근의 사례로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을 상기해보도록 하겠다 (이 부분은 『미디어 오늘』 9월 9일자를 참조하였음). 월간조선 9월호는 <김정일 추종 피의자가 지역정권 장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등이 결성한 한민전 영남위원회가 북한의 대남선동기구인 한민전을 최상부 지도기관으로 삼는 조직으로, 김일성 생일 때 충성의 맹세를 했으며, 울산·부산 지역 재야단체에 조직원을 침투시키는 한편 김정일 보위투쟁을 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사건 피의자 가족 등으로 구성된 '부산·울산 용공조작사건 시민대책위원회'는 경찰이 애초에는 조직의 명칭을 '반제청년동맹'이라고 하더니 7월 24일의 중간수사결과 발표에서는 '한민전 영남위원회 지하혁명지도부'라고 변경했으며, 북한동포돕기 모금을 김정일 보위투쟁이라고 역지를 부리는가 하면 창립식에 심완구 울산시장까지 참석한 '희망의 젊은 연대'를 한민전 영남위원회 산하단체로 규정하는 등 경찰의 수사내용이 사실과 다른 점이 많은데도 대부분 이를 그대로 받아 기사화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대

책위는 경찰의 수사결과가 이처럼 조작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표가 금지된 피의사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월간 조선이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도함으로써 피의자와 그 가족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사와 관련해서는 월간조선이 11월호에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은 김정일을 추종한 사실이 없다>는 제목의 반론문을 실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

최근 월간조선의 안보 상업주의 작품 만들기는 이 한민전 영남위원회 사건 기사에 이어 10월호에 이승복 신화가 진실이라는 거짓말 기사에 이어 11월호의 최장집 교수 기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3. 최장집 교수에 대한 소위 사상검증 기사에 대하여

조선일보 기자 60명의 글들을 모아놓은 『우리는 매일 저녁 7시에 죽는다』(사회평론사 발행)라는 책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검찰은 늘 언론의 보도에 대해 불평을 터뜨린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내용을 검찰 관계자의 멘트인 것처럼 그럴 듯하게 작문을 해댄다는 것이다. 또한 추측·작문 보도를 일삼다가 수사에서 막상 드러난 것이 없으면 “검찰이 정치권이나 재벌의 외압에 밀려 수사를 중단했다”는 식으로 몰매를 퍼붓는다는 것이다. …… 검찰의 이런 비판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니다. 대형사건이 터지면 메워야 할 지면이 하루에 너댓 면씩 펼쳐져 있게 마련이다. 지면은 넓고, 취재는 안되고 …… 그럴 때 기댈 곳은 ‘작문’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작문도 작문 나름이다. …… 기자 입장에선 때론 불가피하게 작문을 할 때도 있는 것이다.(63쪽)

진실을 전달하려고 하기보다는 작문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조선일보 기자들의 오도된 인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조선일보의 기사들 중에 작문 기사가 얼마나 들어있었을까? 또 앞으로는 얼마나 많은 작문 기사들을 보게 될까? 이승복

신화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안보 기사들은 ‘작문’이었다. 그리고 월간 조선 11월호의 <최장집 교수의 충격적 한국전쟁관> 기사도 작문이다.

월간조선에는 작문에 능통한 기자들이 여럿 있다. 10월호에 이승복 기사를 쓴 이동욱 기자와 11월호에 최 교수 기사를 쓴 우종창 기자가 대표적이다. 위에 사례로 든 한민전 영남위원회 기사, 송두율 교수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한 8월호 <송두율은 과연 김철수인가?> 라는 기사, 그리고 외국어대 이장희 교수의 <나는야 통일 1세대>를 이적성이 있는 것으로 몰아간 기사도 우 기자의 작품이다. 우종창 기자의 이 세 기사는 모두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 우 기자의 전과(?)를 알고있는 사람은 그의 기사를 믿지 않을 것이다. 최장집 교수 기사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월간조선은 최 교수의 반론에 대해 반박문을 냈고, 조선일보는 10월 24일자 4면을 도배 질하여 그 요지를 실었다. 조선일보의 지적 수준을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낸 형편없는 반박이었다. 김태익 기사는 <최장집씨 학문적 성향 왜 문제되는가> 라는 기사에서 “고려대 교수이면서 현재는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으로서 …… 공인인 그의 학문적 성향을 검증하는 것은 언론의 고유 임무이자 의무이기도 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서 “그가 학자로서 좌파적 시각을 견지해왔음을 의미하고 지금은 이것이 정부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는 위치에 와 있음을 뜻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주제넘게도 “설혹 그가 학문의 자유를 누릴 상황에 있다 치더라도, 학문도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을 비판하는 것도 언론의 자유”라고 강변하고 있다.

말 꼬리를 잡아 작문을 일삼는 행태를 닮고싶지 않으므로 한 가지만 지적하겠다. 그것은 이 글의 논지이기도 하다. 다름 아니라 검증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조선일보는 그 주체가 되어서는 안되고 될 수도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직은 없지만, 정부의 인사위원회나 국회 인사청문회 같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기구에서 공평무사하게 해야지 조선일보처럼 꼬이고 편향된 신문이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가. 왜 그런가 하는 것은 지금까지 밝힌 대로이다. 다시 말해서 조선일보는 이념적으로 편향된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줄을 세우려 하고 그 줄에 서지 않는 사람은 형편없이 매도해버리는, 그리고 그것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이골이 난 신문이기 때문이다. 언론이 그것을 할 수는 있지만 적어도 조선일보

만은 자제하는 것이 백 번 옳다고 믿는다. 게다가 전문성도 없는 편향된 기자들이 학문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는다니 가당이나 한 일인가? 조선일보는 '언론의 자유'를 말할 자격도 없다.

조선일보가 하는 검증은 '표적검증'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주요한 직책을 맡은 공인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조선일보는 이 원칙을 충실하게 지켜왔는지를 묻고싶다. 정말로 문제가 있는 다른 인물들은 다 제껴두고 왜 하필 한완상, 김정남, 이인제, 최장집과 같은 사람들인가? 최장집 교수의 경우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기를 흔들만한 일을 저지른 전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대학에서 장차 이 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을 가르치는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중견 학자다. 그리고 정책기획위원장으로서는 아직 흠잡거나 평가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쪽집게 집듯이 골라 검증을 하겠다는 데는 드러나지 않은 의도가 있을 것이다.

조선일보의 글쓰기에는 남다르게 독특한 특징이 있다. 결론을 먼저 내리고 취재하고 기사를 쓰는 식이다. 특히 안보 상업주의 기사에서 이 같은 특징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김정일의 본처인 성혜림이 망명했다는 설이 있다. 정상적인 언론이라면 사실 확인부터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 무조건 그것을 기정사실화 해놓고 여러 편린들을 짜깁기하고 그 겉 듯 하게 작문을 한다. 김일성이 사망했다는 설이 있다. 이것도 사실확인 절차는 생략(무시)하고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일단 터뜨리고 본다. 조선일보는 세인의 주목을 받고 신문은 날개 돋듯이 팔린다. 정치 사회적인 위상이 한층 더 올라간다. 나중에 오보로 판명나도 개의치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모르고 지나가거나 무관심하다. 이런 행태를 지적하면 친북한 좌익 상업주의로 몰아 부치면 그만이다.

최장집 교수에 대한 표적검증은 이 같은 발상과 버릇에서 나온 것이다. 작품이 될만한 대상을 물색하고, 대상을 찾으면 '각본'에 의해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선정적으로 매도하는 기사를 터뜨린다. 최 교수는 그 대상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대상으로 선정해놓은 후보가 여럿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도 있다. 이제는 그 발상을 뜯어고치고 버릇을 고쳐줄 때가 되었다. 조선일보를 바로 세우는 일은 이 시대 가장 중요한 개혁과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진정한 안보를 위해서라도 조선일보의 안보 상업주의는 영원히 추방해야 한다. ■

조선일보의 안보 상업주의는 외면 주의 강도를 제정한다.

공동성명서(안) - 토론회가 끝난 이후 최종 확정됩니다.

<조선일보>의 왜곡보도와 언론폭력에 분노한다!

지금 조선일보사는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를 앞세워 한 양심적인 학자를 안보상업주의의 희생물로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장집 교수의 현대사 연구에 대한 왜곡보도 사태가 그러한 사실을 뚜렷이 말해준다. 새로운 천년의 시작을 코앞에 두고 일어난 족벌언론 조선일보사의 시대착오적이고 비이성적인 행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한다. 그리고 조선일보사의 작태가 민주주의의 진전과 민족화해라는 시대적 과제에 해결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최장집 교수의 학문적 논지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의도적인 사실 왜곡과 짜집기를 통한 자의적인 해석은 '현대판 마녀사냥'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사는 공직자에 대한 사상검증이라는 허울 아래 자신의 폐쇄적이고 냉전적인 사고를 감춘 채, 최장집 교수에 대한 인신공격을 무책임하게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가 확고한 민주적 신념의 소유자이자 객관적인 역사이해를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는 학자라는 사실은 그의 저서를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최장집 교수의 학문적 업적은 이미 국내의 정치학계에서 공인될 정도로 탁월한 것이기도 하다.

조선일보사의 희생양 만들기는 이미 한 개인의 명예훼손이라는 차원을 넘어섰다. 이번에 <조선일보>가 보여주는 작태는 비뚤어지게 해석된 '언론의 자유'를 빌미로 학자·지식인이 누려야 할 학문의 자유를 억압할 뿐 아니라 민주사회의 시민이라면 누구나 향유해야 할 사상·표현의 자유를 짓밟는 짓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본래 언론의 자유라는 것은 합리적 이성과 비판의 정신을 무기로 한 '정론직필'일 경우 그 빛을 발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장집 교수에 대한 조선일보사의 공세는 무책임한 비이성적, 이념적 폭력행위일 뿐이다. 나아가, 의도적으로 날조된 기사를 보도했다는 점에서 그것은 우리 국민 모두를 우롱하는 처사이자 알 권리를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조선일보사가 이번에 자행한 일련의 왜곡보도·억지주장에 대해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그 성격을 규정한다. 19세기 말 '반지성'과 '반문명'의 상징으로 전세계의 웃음거리가 된 드레퓌스 사건이 대망의 21세기를 앞둔 문명사회에서 다시 부활한 것이다. 모름지기 학자라면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이다. 진리에 대한 접근은 다양성의 원리와 개방성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학문활동의 자유가 부정되고 그리하여 진리에의 접근이 원천적으로 봉쇄당하는 사회는 죽은 사회라고 할 수 있다. 죽은 사회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역사의 진전을 이루기란 불가능하다. 지금 조선일보사는 우리 사회를 생명력을 잃어버린 죽은 사회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조선일보>는 우리 사회가 역사적 전환을 이룰 만한 중대한 국면을 맞이할 때마다 낡은 틀을 유지하기 위해 이념적 폭력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힘있는 비판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 또한 사실이다. 조선일보사의 오만함이 그토록 오랫동안 수정됨이 없이, 아니 오히려 강화된 채 지속되어 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러한 사실에 연유하는 몫이 적지 않을 것이다.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역사 진보를 위해 노력해 온 우리는 지금까지 일부 냉전적 언론이 안기부 등의 반민주적 공안기관에 못지 않게 지식인과 국민대중에게 턱없는 이념적 폭력을 휘두르는 것을 방임해 온 데 대해 마음 속 깊이 반성하면서, 이제 조선일보사의 비이성적 행위를 근본적으로 잠재우기 위한 역사의 대장정을 시작하고자 한다. 민주사회의 공적(公敵)인 시대착오적 마녀사냥 놀음을 저지하는 일에, 비판적 이성과 시대의 양심을 믿는 많은 분들과 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동참이 있기를 바란다.

우리의 요구

1. 조선일보사는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데 대해 최장집 교수와 양심적 학자에게 공개 사과하라!
1. 폐쇄적 냉전관으로 개혁적 인사의 이념적 흠집내기 행위를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민주적 발전을 가로막는 데 앞장서 온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역사 앞에 참회하라!
1.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이념적 폭력을 자행한 <월간조선>과 <조선일보>는 국민 앞에 사죄하라!
1. 비이성적 시대착오적인 행위에 동참해온 조선일보사의 양심적인 언론인들은 침묵과 방관에서 벗어나 역사의 대장정에 동참하고 자정운동을 즉각 전개하라!
1. 참된 언론의 자유를 신봉하는 모든 비판적 언론인들은 <조선일보>의 비뚤어진 언론자유관을 바로잡는 데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
1. 언론이 비이성적 반개혁적으로 치달는 것을 경계하는 모든 민주시민은 조선일보사가 참회·사과·시정의 자세를 보이지 않을 경우 조선일보사의 모든 간행물에 대해 구독하지 않을 것을 제안한다.
1. 언론개혁 없이 참된 개혁은 있을 수 없다. 현 정부가 우리 사회를 진정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면 조선일보사에 대한 개혁부터 즉각 시행하라!

이러한 우리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비판적 지성과 시대적 양심의 힘을 모아 조선일보사에 대한 전면적인 비판운동과 함께 언론개혁촉구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1998년 11월 2일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 학술단체협의회 외 언론개혁시민연대 참가단체 일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동아언론자유수호투쟁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바른언론을위한시민연합, 방송위원회노동조합, 방송인총연합회, 보건의료인포럼, 부산민주언론운동협의회, 불교언론대책위원회, 시청자연대회의,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열린사회시민연합, 자주평화통일민족회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불교운동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추진위원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기자협회,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회,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정보학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청년연맹(준), 환경운동연합 이상 38개 단체)

SBS <라디오 칼럼>에서 자행된 이른바 조갑제식 '사상검증'의 방송 능멸

새삼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신봉하고 추구하는 민주주의는 학문과 표현의 자유, 그리고 타인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관용의 토대에서 꽃피는 체제다. 그러나 작년 월간 조선 등 일부 매체에 의해서 자행되는 최장집 교수에 대한 이른바 '사상검증'은 사실상의 매카시즘적 폭력으로서 자유민주주의적 가치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수준의 짓임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월간 조선의 '사상검증'은 최근 여러 언론 단체와 학계 등으로부터의 본질적인 지적에 직면하고 있어 우리는 그나마 다행으로 생각한다. 우리는 이같은 논의를 지켜보면서 우리 사회가 성숙해지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런데 그러한 논의와 별도로 10,000여 현업 방송인의 단체인 우리 방송인총연합회 차원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였다. 지난 10월 22일 월간 조선의 조갑제 국장이 그가 출연하는 SBS의 <라디오 칼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당일의 방송시간인 23분여 내내 월간 조선과 조선일보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아니 훨씬 더 일방적으로 최장집 교수를 매도한 것이다.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방송내용은 SBS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우리는 백번 양보해 조갑제 국장이나 월간조선 또는 조선일보가 추구하는 방식의 언론자유를 인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한 조국장이 그런 식으로 '방송심의규정'의 정신을 침해하는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다. 방송은 "사회적인 쟁점이나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는 균형있게 다루어야 한다"고 방송심의규정에서 명시하고 있다. <라디오 칼럼>의 '칼럼니스트'로서 그런 원칙을 모를 리 없는 - 몰랐다면 무지와 오만이다 - 그가 방송에 때마침 출연하는 것을 빌미로 '대립되는 사안의 한쪽'을 공격하는 일은 모름지기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능멸이요, 비열한 행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것이 조갑제식 '사상검증'인가.

우리는 여기서 그런 작태를 결과적으로 용인한 SBS의 처사에 대해서 엄중한 항의를 하지 않을 수 없다. SBS 당국은 문제의 방송이 나가기까지 제대로 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했는가. 그리고 그런 방송이 나간 후 지금까지 최장집 교수측에 동시간만큼의 반론권을 제공하는 등 성의있는 조치를 취했는가. 방송의 공정성에 대한 이러한 불감증은 SBS 경영진의 방송에 대한 무철학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만하다. 우리는 이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도 주시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금 학문과 표현의 자유가 우리의 민주적 가치를 실현하는 보루임을 되새기고자 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드는 방송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시비가 나타나지 않아야 한다는 타산지석의 교훈을 명심하는 바다.

1998. 11. 2.

한국방송인총연합회

위대한 민족의 승리인 4월혁명은 역사속에서의 굴종과 독재와 이간질을 가장 증오한다. 당연히 4월혁명의 부흥은 만민족 만민주인론의 표본인 조선일보를 가장 추악한 인본주의자로 추방해 왔다.

조선일보는 인본주의주의에 기생하여 곡필아세하던 버릇대로 5.16 쿠데타에 밀려서 군사통치와 유신독재의 대변인을 자임해서 획극한 언론재벌의 불적사상을 토대로 전두환 노태우 군사반역정권을 추방해 왔다. 조선일보는 또한 반역사적 3당합당의 산물인 김영삼정권의 산파역이자 조련사로서 부패정치와 파국경제의 국가위기에 걸림돌 역할을 한 권위유착 정경유착의 표본이었다. 따라서 국민은 50년만의 정권교체로 탄생한 국민의 정부가 개혁작업 과정에서 조선일보를 어떻게 처리해 내는가를 주목해 왔다.

일제 식민통치하 민족반역 주구인론의 치부를 세삼 재탄하지 않더라도 조선일보는 민주주의와 통일을 향한 국민일원을 음모적으로 침요하게 파괴시키는 것을 그의 상임인론의 최대목표로 해 왔다. 조선일보는 추우만공 냉전이테올로기를 전가의 보도로 하여 세상만사와 모든 사물을 흑백논리로 재단, 선한 인간양심과 반우성기를 날타하는 언론고문 행패를 사행해 왔다. 인간육신을 짓어기는 이근양고문기술자를 국민이 서주한다면 조선일보는 인간정신을 황폐화시키는 또하나의 고문기술자로 부르는 것을 주지할 이유가 없다.

조선일보는 이승만퇴살리기와 박정희신앙을 조작하여 역사의 시계바늘을 군사통치, 자유양독재, 더 거슬러 일제 식민통치시기로 되돌려 놓으려는 정신착란의 광태를 시습지 않고 있다. 일제잔재를 청산하고 진정한 자주의 민족기반에서 민주화와 통일을 이룩하고자 분기했던 4월혁명의 열이 오늘날 헌법정신의 근간으로 되어 있다. 그러므로 4월의 부흥을 계승하고 깨어있는 국민을 단호히 조선일보의 인본쿠데타적 횡포를 용서할 수 없다. 지난 대선에서 색깔논쟁과 용공유세로 평화적 정권교체라는 시대적 여망에 뻔뻔스럽게 도전했던 조선일보가

김대중 당선자의 민주적 선택의 귀결에서 자기만성과 사법적 개혁의 변신이 있기를 참고 기다린 인민의 국민적 관용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재미로 개 붓준다고 최장집교수 불이뜰기에서 조선일보는 방상적 분색을 기어히 드러내고 받았다. 대통령사문 정책기획위원장을 맡고있는 최장집교수 죽이기는 나쁜아닌 김대중대통령 죽이기 이다. 만에 하나 최장집교수의 눈분이 거슬러나면

반모스 신문사 주위의 학술논쟁을 벌이면 될 것이 아닌가.

이전의 김대중축이기가 야당발상과 정치지도자에 대한 태리였다면 지금의 김대중대통령 축이기는 민주주의 축이, 합헌적 정부축이, 국민 축이, 국민 정부의 개혁축이이다. 조선일보가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솔직히 고백하여야 한다. 민주주의야 추락하는 것은 조선일보의 호감을 담보했던 독재의 망령을 퇴살해보지는 유희한 호심이 아니고 무엇인가. 나라야 망하는 흥하는 조선일보만 살찌면 된다는 방곡적 이기주의가 아니고 무엇인가. 국민이 안락해 하는 불안해 하는 메카시적 광란을 부추기는 반민주적 폭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진리와 정의의 구현을 위한 사상과 학문의 자유, 곧 민주주의 요새를 박살내어 암흑시대로 되돌려 인간 자체를 파괴시키겠다는 배운 짓거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최장집교수가 뻔생이란 말인가. 최장집교수가 진북주의자란 말인가. 아예 조선일보는 최교수를 간첩이라고 해야 적성이 쏠린지도 모른다. 조선일보는 온 학계 지식계가 웃고 세계 지성이 모멸하고 국민이 환멸을 느끼는 것을 특별히 적시해야 한다. 맹목적 단죄보다도 정치적 적죄보다도 가장 부서운 것은 국민의 판단이며 이사의 심판이다.

조선일보는 마지막 양식을 퇴살해 국민앞에 사죄하고 범죄적 인본폭력을 짚어치우라.

조선일보가 국민과 역사앞에 대죄를 서슴지 않는 틈새를 준 것은 민주화와 개혁을 나전하고서도 간히 이런 사이비 인본에 손 못대는 현정부에도 책임의 반분이 있다고 생각한다. 언론개혁을 밋서가고, 영거주출한 민주화정책과 통일정책에서 백들면서 국가보안법을 온존시키고, 이적과 반공의 세단법으로 국민을 여진히 부자유스럽고 불편스럽게 하고 있는 현정부의 복지부동과 안인주의가 계속되는 한 조선일보의 못된 인본폭력은 거듭 되풀이될 것이다. 4월혁명의 주역들인 우리는 현정부에 대해 개혁다운 개혁을 더 이상 미루지 만 것을 충심으로 당부하면서 조선일보는 1960년 4월 19일 혁명의 불길과 함께 서울신문과 반공회관이 잿더미로 화한 부서운 역사의 심판에서 값진 교훈을 되찾기를 위숙하게 간고한다.

1998년 10월 30일

사 원 혁 명 회

공동의장 노강호 박태영 심재택 이사장 홍근수 부설사원혁명연구소장 조영진
이 회원 인동